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수신자 : 교육부장관

참 조 :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미래전략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교육비서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유)

제 목 : 문·이과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건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에서 공문[기과협 2014-02]으로 귀 부에 송부한 건의서(이하 “건의서”)에 대하여 귀 부에서 공문[교육과정정책과-3127]으로 회신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관련입니다.

3. 귀 부에서 2014년 4월11일 동정자료(이하 “동정자료”)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의 구성을 11명의 명단과 함께 발표하였으나 의견서에서는 동 연구위원회가 이와 달리 실제로는 12개 과제 연구책임자로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과협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합니다.

가. 동정자료에서 밝힌 12개 정책연구 과제의 책임자는 [붙임1]과 같습니다. 책임자 12명 중 무려 6명이 ‘교육과정학’ 전공자입니다. 또한 나머지 교과분야 전문가인 6명 중 4명이 문과출신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 교수들입니다. 따라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진이 문과출신 연구자의 수가 절대 다수이고 이과출신 연구자의 수가 절대 소수인 편향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6명의 교과 연구 책임자만으로 모든 교과 영역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총 12명 중 10명인 연구진에서 향후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학교 과학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다. 또한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과학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대한민국의 기초과학계를 대표하는 기과협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4. 귀 부는 기과협이 건의서에서 제기한 개정안은 초기 논의안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히며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연구한다고 했으나, “현장”과 “전문가”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교육 공급자의 입장만 대변할 우려가 큼니다.[붙임2]

5. 이에 기과협은 다음과 같은 요청합니다.

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시급하게 교육과정을 개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편향된 구성의 위원회가 주도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 중단.

나. 균형적인 교양을 갖춘 바람직한 미래세대 육성에 필요한 문·이과 통합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

6. 대한민국의 기초과학계를 대표하는 기과협은 귀 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개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귀 부는 의견서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한 본 협의체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시의적절하고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본 협의체도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월 중으로 귀 부와 기과협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연석회의** 자리를 만드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7. 이에 대한 회신을 7월 14일(월)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2.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회의 편협성. 끝.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회장 김 명 환



담당자 이나래 국장 박여진 기과협 간사 07/04
대한수학회 총무이사 이종우

협조자

시행 기과협 2014-04 (2014.07.04) 접수
우 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202호 / <http://www.basicsscience.or.kr>
전화 02-565-0361(내선 103) / 전송 02-565-0364 / kms@kms.or.kr / 공개

[붙임1]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

12개 정책 연구과제의 책임자 구성

순 번	정책 연구 과제명	정책 연구 책임자		
		성명	소속	전공
1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김경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2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황규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3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소경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4	학교 현장, 국가·사회의 요구사항 조사 연구	강현석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5	교과 교육과정 개발방향 설정 연구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6	국가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연구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7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김창원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
8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박경미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수학교육
9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김인석	동덕여자대학교 영어과	영어교육
10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구정화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지리교육
11	역사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최상훈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역사교육
12	과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송진웅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물리교육

- 모두 교육학자이며, 이과 출신은 12명 중 2명 뿐.
- 사회(역사 포함) 대 과학의 비중이 2:1로 이 역시 사회에 과다하게 편중됨.
- 사범계 출신만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따른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사범대 졸업생의 교사 인력 배출의 이해관계에 의한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큼.
- 국가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미래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13대 미래성장동력’ 등의 미래전략 실천을 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함.

[붙임2]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회의 편협성

1. 현장 의견 수렴 대상자의 편협성

가. 의견수렴 대상자가 교육 공급자와 교육 수혜자로만 구성

- 현재 진행 중인 의견수렴 대상자는 교사, 학생, 학부모
- 교육 공급자인 교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의견을 반영
-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는 당장의 편함을 위해 교육 내용 축소만 요구

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음

- 중등교육의 1차 수요자는 대학, 교육의 궁극적인 수요자는 산업체인데, 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다. 공교육의 목적에 어긋난 의견 반영

- 공교육의 책임은 학생이 미래에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
- 교육 공급자는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
- 교육 수혜자는 대학 입시의 유불리만 따지고, 미래 사회 대한 인식 부족

2. 전문가 집단의 편협성

가. 전문가 집단의 편협성

-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 협의회는 사범대 교수 만으로 구성
- 교육 공급자인 교사를 배출하는 사범대학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의 우려

나. 전문가 집단의 부적절성

- 교육학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를 연구하는 집단이며, 제자의 취업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있음.
-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는 미래부, 산자부 등 미래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